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9. 27

발 의 자 : 박영순 · 김운덕 · 김정호

박 정 · 장철민 · 전해철

정태호 · 조정식 · 홍영표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급작스런 집중 호우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산사태 및 침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조기 경보 및 대피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.

현행법은 지자체장 등이 재난사고 발생 시 ‘대피안내’나 ‘권고’뿐만 아니라 ‘대피명령’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, 대피명령에 따른 주민 불편과 반발 등 부작용 및 책임소재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가 대피명령에 소극적인 상황임.

이에 재난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하고자 함(안 제40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전단 중 “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”를 “재난 발생으로”로, “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”을 “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”로, “명할 수 있다”를 “명해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4조제1항 중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”를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, 제40조 및 제4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0조(대피명령) ① 시장·군수 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은 <u>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</u>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·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.	제40조(대피명령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난 발생으로</u> ----- ----- ----- <u>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명해야 한다.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4조(손실보상)① <u>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(제46조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.</u>	제64조(손실보상)① <u>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, 제40조 및 제45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~④ (생략)	②~④ (현행과 같음)